

# 소비자 중심 '식품안전체계' 투명·신뢰성 높여

안전성 조사 및 GAP·친환경 인증, 이력추적관리제도, Safe Q 시스템 등 농산물관리 철저  
'조사기능 강화·과학적 관리·자율적 관리체계 구축·유해물질 잔류기준 설정 현실화' 해야

**WTO** 체제가 출범됨에 따라 각국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은 오래 전부터 안전성검사를 강화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 뿐만 아니라 자국내 농산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병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소비자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2000년 이후 광우병, 조류독감, 어류의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김치의 기생충(란) 검출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건이 자주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등 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농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증산위주, 생산자



김완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팀장

위주의 농업정책에서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소비자 중심의 농업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친환경농산물인증,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농산물이력추적관리를

도입하고 부적합 농산물의 시중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생산단계부터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과 같은 농산물 유해물질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1. 농산물 안전관리 현황

### 가. 농산물 안전성조사

산지에서의 농산물 안전성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단계에서 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 유해물질에 대한 사전적 예방 차원의 안전성 조

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해물질 검사를 69천 건까지 확대하는 등 부적합 농산물의 시장 출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조사량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07부터는 소비자에게 보다 더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그 동안의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객관적이고 통계적인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관리대상 농산물중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46개 품목(전체 농산물의 99% 점유)과 주로 생식으로 소비되고 안전성이 취약한 품목 30개를 선정하여 중점관리하고 소비량, 부적합 비율을 근거로 관리수준을 달리하고 있다. 특히 소비량이 많은 품목을 대상으로 시중 유통·판매단계에서 5,000건을 수거하여 소비단계의 안전성 확보수준을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농산물의 안전성 수준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농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안전성이 취약한 30개 품목도 여름철에는 콩나물, 오이, 고랭지채소류, 가을철에는 사과, 포도 등의 과류와 김장채소류, 겨울철에는 상추와 깻잎 등 시설채소류 등으로 구분하여 계절별로 중점관리를 실시하였다.

#### 나.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인증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된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식품안전의 공통된 목표이다. GAP인증은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농산물의 위해요소를 일관되게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의 시범사업을 끝내고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07년에는 농협, 유통공사, E-마트, 롯데마트 등 30개 민간인증기관을 지정, 16천

농가를 인증하였으며, 쌀, 과실류 등 77품목, 약 18만톤이 생산·출하되었다.

GAP인증의 기반이 되는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RPC(미곡종합처리장) 등 농산물 수확 후 관리시설 298개소를 우수농산물 관리시설로 지정하고 GAP 인증품에 대한 소비자 및 대량수요처인 유통업체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언론매체와 지하철, 시내버스 등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 다. 친환경 인증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을 위해 추진해온 친환경 농산물 인증은 안전성과 품질이 확보된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의 증대와 맞물려 인증신청이 매년 6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07년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생산량은 122,882ha/178만톤까지 성장하였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수요증가에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인력과 시설을 갖춘 민간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민간인증기관은 38개소, 전체 인증물량의 약 50%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재배부터 유통·판매단계까지 연 2회 이상 철저하고 엄격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특히 유기재배 선도 농가를 중심으로 이력추적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1200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 라. 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

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는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안전성 문제발생 시 이력을 역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제도로 Codex에

의하여 이력추적의 개념이 정립되었다. EU는 2005년 1월부터 모든 식품에 대해 이력추적관리제도 적용을 회원국에 의무화하는 등 각 국에서도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이력추적 개념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우고기 생산 및 유통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농산물의 경우 GAP 이행을 위한 의무조건으로 도입하여 현재 31천농가(생산자)가 등록, 운용 중에 있다.

### 마. 농식품안전안심정보시스템 「Safe Q」구축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로 선정된 농축수산물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Safe Q」시스템의 구축은 농산물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농산물의 안전성을 보증(Assurance)하는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정보제공시스템(Contents Provider)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농산물 안전성관리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위험정보를 수집·전파, 환류하는 쌍방향의 위험정보교환채널(Risk Communication Channel)을 구성하여 농산물 안전사고에 긴급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2. 농산물 안전관리의 문제점

### 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설정 미흡

소면적 재배작물의 경우 안전성 조사결과 가장 높은 부적합 비율을 보이고 있어 안전성이 가장 우려되는 농산물임에도 불구하고 농약 수요량이 적어 전용농약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재배 농민들은 관행적으로 타 작물에 사용하는 미등록 농약을 사용하는 등 농약 오·남용의 우려가 작지 않은데다 상대적으로 농약잔류

허용기준은 불검출 수준의 최소기준(0.05ppm)을 적용함으로써 농가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이 잔류농약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금속 오염,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등에 적극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 나. 위해성 평가 연구기능 강화 필요

지난 10년간 국내에서는 위해물질에 대한 독성정보, 위해평가를 위한 기본데이터 및 평가방법론, 분석기술 등 위해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필수사항들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채 미국과 유럽 같은 선진국의 안전성관리를 쫓아 안전성 조사물량에 의존한 것이 사실이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농산물 안전성 감시를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하여 수행하기 위해 위험분석원칙을 도입한 것과 같이 위해성 평가 및 유해성 관리, 위해성 정보교환에 대한 연구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소를 찾아내 이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다. 소비자 교육 및 정보공개 필요

정부의 농산물 안전성관리 정책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2%가 선진국 수준 이하라고 답했으며 정부의 식품안전 발표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축소발표', '조사기관 마다 차이' 등의 이유로 21%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44.6%는 보통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이 모든 농산물의 유해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소비자의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공개되고 있기 때문이며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 3. 농산물 안전관리 발전방안

#### 가.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체계 구축

EU의 건강·소비총국소비자위원회와 영국의 식품기준청소비자위원회와 같이 선진국들은 식품의 안전문제를 소비자문제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소비자가 참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가 참여하는 농산물 안전관리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투명성

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나. 농산물 안전성 조사 기능 강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생산단계에서 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 유해물질 조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생산단계 안전성조사는 유해물질이 잔류하거나 오염된 농산물의 시중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이 있으며,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생산자에게는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현재보다 엄격한 제재로 부적합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 다. 과학적·합리적 농산물 안전성 관리

1990년대 유럽은 BSE, 다이옥신 등을 경험하면서 직관에 의한 정책수립과 사후처방적인 식품사고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실감하고 식품안전문제를 위험평가-위험관리-위험정보교환을 축으로 구성되는 위험분석체계에 의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농식품의 다양한 섭취경로별로 농식품에 잔류하는 각각의 유해물질량을 측정하는

유해물질 식이노출량 조사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라. 자율적인 안전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농산물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안전농산물 공급을 위해서는 GAP, 친환경인증, 이력추적관리등록 등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안전농산물 생산·관리체계가 조기에 정착되어야 한다. 이들 제도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준개선, 인증교육·훈련, 관리시설지정 등 실시기반을 폭넓게 구축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마.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설정 및 현실화

환경오염물질 등 새로운 유해물질이 출현하고 있고, 새로운 농작물과 농약이 보급 확대되고 있어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또한 농산물에 실질적인 위해요소가 되는 유해물질도 과거 농약에서 중금속, 식중독균, 환경호르몬 등으로 이동하고 있어 안전성 관리기준이 되는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은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 바. 소비자 신뢰구축 기반 마련

부처간 정보 공유를 통해 식품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구매정보 제공을 위해 기관간 부적합 농산물의 세부적 정보 공유와 소비자 정보공개를 구분하여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소비자위원의 명예감시원제 운영, 소비자단체를 통한 안전농산물 이용교육 및 시책 홍보추진,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프로그램 운영으로 소비자에게 다양한 역할과 정보를 제공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쌓아야 할 것이다. Y